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

함께하는  **행동하는**
민생의회 **정책의회**

제공일자	2024. 11. 25. (월)	
경제환경 전문위원	김재현	803-5023
경제환경 정책지원팀장	박대식	803-1525
담당자	이진경	803-1526

박종필 의원, “공공 부문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인 EU, ESG 규제 도입
-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시되면서 기업은 물론 공공분야까지 확대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8일(목),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공공·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ESG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기업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시되면서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다섯 번째로 큰 교역 상대인 EU가 ESG 규제를 적시한 「공급망 실사법*」을 202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향후 상당수 국내 대기업은 물론 같은 공급망 안에 있는 중견·중소 협력사에도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로까지 ESG 경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으로, 2024년 7월 25일 공식 발효되어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규제 중 하나로, 기업은 생명, 안전, 노동3권, 토양·수질·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실사하고, 방지·개선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에 박종필 의원은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부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다각적인 지원 촉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공공 ESG 경영 선도 촉구 ▲시민들의 ESG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 ESG 운동 제안 등 정책 제언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업의 입장에서 ESG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 기업의 약 73%는 ESG 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 전문성 부족, 비용 부담, 지원 제도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며, “대구시가 ESG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제 민간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공공 부문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ESG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산하 기관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청렴윤리경영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ESG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체육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ESG 운동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ESG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